THE GLOVAL
AGRO-INFORMATIOM

NO. 2007-3
www.maf.go.kr

국 제 농 업 소 식

2007 / 3

주요 통상쟁점
세계농업 흐름 분석
농업통상 이야기
특별 기고
해외통상 기사

농 림 부
국제농업국

< 목 차 >

【 주요 통상 쟁점 】

▶ 도하라운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 G33각료회의 결과 ·····

▶ 주요 나라와 FTA협상, 어떻게 하고 있나? ·····

【 세계농업 흐름 분석】

▶ 2007년 미국농업 통상환경 ·····

▶ 캐나다 농업현황 및 정책개요 ·····

▶ 일본 농림분야 지적재산권 전략 ·····

▶ 중국 WTO 가입 후 농업의 성과와 향후대책 ·····

【농업통상 이야기】

▶ 푸드 마일-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인가? ·····

【특별 기고】

▶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

【 해외통상 기사】

▶ 라미 WTO사무총장 멕시코 경제세미나에서 연설 ·····

▶ 미국-말련 FTA 잠시 중단 ·····

▶ 어두운 도하라운드 농업협상 ·····

▶ 한미 FTA 쟁점 협상(3.19 주간) ·····

▶ 유럽연합 케언즈 그룹의 민감 품목 제안에 반대 ·····

▶ 한미 쇠고기 통상 쟁점 ·····

주요 통상 쟁점

도하라운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 G33 각료회의 결과-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서기관 이충원

1. G33 각료회의, 자카르타에서 열려

한국,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파키스탄, 케냐 등으로 구성된 개도국 특별품목그룹인 G33 각료회의가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G33은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한 G33 공조입장을 재확인하고 G33의 공조의지를 알리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각료회의에 참가하여 G33내 우리의 위상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토대를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회의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피터 만델슨 EU 집행위원, 셀소 아모림 브라질 외교장관, 케말 나쓰 인도 통상장관, 마쯔오카 일본 농림수산대신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치적 의미가 큰 회의였는데, 미국 이외의 주요 4개국(G4), G20(수출개도국 그룹), G33, G10(수입국그룹) 등 협상 주요국 및 그룹이 공조하여 국내보조 분야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G33은 최근 주요국간 회동에 우려를 표하며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그간 G33내에서 논의해 온 SP(특별품목) 지표(indicators) 목록 및 각료선언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회의에서 G33은 SP, SSM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33내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G20 등 여타 개도국의 협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SP의 개수와 대우에 대해 내부논의 등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2. 무엇을 논의했나?

가. 현 협상상황 평가 및 향후 G33의 협상 대응방향

인도는 이번 라운드가 개발라운드이며 SP(특별품목)는 개도국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장치라고 주장하면서 G33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SP 자기선정의 원칙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SP 개수도 협상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이번 각료회의가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SP, SSM에 대해서 G20 등 여타 개도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케냐, 스리랑카, 과테말라,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도 SP, SSM의 중요성과 G33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논의 본격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SP 개수 및 대우 등에 대한 G33 내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함께 향후 협상 급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SP 개수와 대우 등에 대한 G33 내부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최근 주요국 회동 결과 (G20 조정국인 브라질의 설명)

브라질은 2008년 초 협상 완료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양자간, 복수국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자차원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제네바차원의 논의가 빨리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 회동에서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미국과 EU가 좀 더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며, 주요국 논의에서 구체적 수치에 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핵심 쟁점에 대한 개념 위주로 논의했다는 것이 브라질의 설명이었다.

브라질은 품목특정 AMS에 추가해 AMS와 Blue box에 품목특정적인 총액한도(joint cap)를 도입함으로서 Box shifting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 (AMS에서 Blue box로 가는 것은 가능하나 그 역은 불가한 규율 도입을 협상중이며, 이에 대해 여타 G4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평가)을 강조하였다. 시장접근 분야는 주로 민감품목을 논의한 바 TRQ 증량폭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이며, 특히 브라질은 TRQ 증량은 MFN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NAMA(비농산물시장접근) 관련 미국 등이 관세감축 스위스공식 계수를 선진국은 10, 개도국은 15를 주장하고 있으나 브라질로서는 개도국 계수

15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SP, SSM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별도 G20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 G33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다. 라미 총장 등 기타 초청인사 발언

라미 총장은 SP, SSM은 추가적인 신축성(extra flexibilities)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SP, SSM이 농업보호막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G33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precise)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TPA 종료시점을 감안할 때(6월 말), 오는 4월 말까지는 핵심쟁점 수치 및 규율(discipline)에 돌파구가 필요하다 강조하였고 SP 개수와 대우 등도 보다 정교하게 정리해야 하며, 자유화(liberalization)와 민감성(sensitivities)간에 균형 및 능력에 상응하는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쯔오카 일본 농림수산대신(G10 대표)은 G10과 G33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후, SP 및 SSM을 제약하려는 미국과 케언즈의 시도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쯔오카 대신은 관세상한 반대 등 G10의 핵심이해에 대한 G33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협상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아모림 브라질 외교장관은 작년 7월 이후 주요 4개국 전체가 아닌 주로 양자차원의 접촉이 있었으며 구체수치를 협상하기 보다는 개념위주로 논의를 했다고 소개하였다. 아모림 장관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장을 반복해서는 협상 진전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특히 선진국 보조 감축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G20, G33 등 개도국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TPA 연장여부가 DDA협상을 좌우해서는 안 되며, 수출보조 철폐, 국내보조 감축, SP,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타 시장접근 문제 등 실질적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쓰 인도 통상장관은 도하라운드가 개도국라운드이며 SP, SSM은 상업적 이해의 문제가 아닌 생계유지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협상 진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자차원의 협상이 가동되어야 함을 강조한 후, G33이 SP indicators를 간소화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G33도 입장을 최대한 현실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여타 나라들도 이에 상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SP, SSM이 협상 결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협상진전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먼저 지도력을 보여야 하며 다자차원의 협상이 조속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간다(아프리카그룹)는 SP, SSM을 포함한 개도국 우대, 세인트루시아(ACP그룹)는 특혜잠식, 바베이도스는 소규모취약경제국(SVEs)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한편, 금번 회의에 불참한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상호 양보와 입장 조정이 필요하며 미국으로서는 TPA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요지의 수잔 수왑 미국 무역대표(USTR) 명의의 서한을 보내왔다.

3.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

최근 주요국 움직임을 감안할 때 관세감축폭,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아직은 큰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협상은 언제든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DDA 협상 진전에 대비해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분야 등에 대한 주요 쟁점별 대응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G10 및 G33, EU 등 주요국간 공조활동을 통해 우리의 협상 입지를 지속적으로 공고화 해갈 생각이다. 특히 우리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G33 국가와의 공조가 중요한 바 향후 G33내 논의에의 건설적 기여를 통해 G33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DDA 협상 전개의 핵심변수인 미국 농업법(Farm Bill) 개정 동향,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며 DDA협상 동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및 이해 제고도 도모해 나갈 것이다.

< 참고1 >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구분	대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G6	미국, EC, 호주, 브라질, 인도, 일본		농업협상주요국 그룹
G10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 관세상한 설정 반대 ·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주장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G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 개도국 입장 대변 ·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수출보조 철폐 · 개도국 우대 강화	강경 개도국그룹
G3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 개도국 입장 반영 · SP 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에 중점	특별품목 그룹
G90	ACP, LDC, 아프리카그룹 국가들로 구성 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 등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	
ACP 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77개 국가	-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	

< 참고2 >

WTO/DDA 농업협상 주요국 제안 내용

		E U		미 국	G20	G10	ACP
		10.13 제안	10.28 제안				
시장접근	구간경계	(선진국) 30-60-90 (개도국) 40-80-120	(선진국) 30-60-90 (개도국) **30-80-130**	20-40-60	(선진국) 20-50-75 (개도국) 30-80-130	(선진국) 20-50-70 (개도국) 30-70-100	(선진국) 20-50-80 (개도국) 50-100-150
	관 세 감축률	(선진국) 20-30-40-50 (개도국) 13.3-20-26.6-33.3	(선진국) **35-45-50-60** ***최하위(20~45%)** (개도국) **25-30-35-40** ***최하위(10~40%)**	60-70-80-90	(선진국) 45-55-65-75 (개도국) 25-30-35-40	(예시1) 27-31-37-45 (예시2) 32±7-36±8-42±9 -50±10	(선진국) 23-30-35-42 (개도국) 15-20-25-30
	관세상한	(선진국)100%	(선진국)100% **(개도국)150%**	(선진국)75% (개도국) X%	(선진국)100% (개도국)150%	반대	반대
	민감품목	8%	8%(축소가능) **관세감축은 ⅓~⅔ 수준**	1%	(선진국) 1% (개도국)1.5%	일정 비율 (10~15%)	-
	특별품목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한시적 인정	특별품목 지지	-	관세감축 면제 TRQ 증량 면제
	지리적 표 시	-	**모든 농산물 대상 지리적 표시 보호**	-	-	-	-
국내보조	AMS	EU·일본 70%감축 미국 60% 기타 -	EU·일본 70%감축 미국 60% 기타 **50%**	EU·일본 83%감축 미국 60% 기타 37%	EU·일본 80%감축 미국 70% 기타 60%	EU 70%감축 일본·미국 60% 기타 40%	
	무역왜곡 보조총액	-	**1구간 70%감축 2구간 60% 3구간 50%**	EU 73%감축 미·일 53% 기타 31%	EU 80%감축 미·일 75% 기타 70%	EU 73%감축 일본·미국 65% 기타 45%	
	de-minimis	최소 65% 감축	**선진국 80% 감축**	50% 감축	AMS없는 개도국 감축면제	-	
	Blue Box	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	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	농업총생산액의 2.5%(상한)	Blue Box 제한	신규 블루박스 추가논의필요	
	Green Box	현행 규정 유지	현행 규정 유지	현행 규정 유지	개도국 관련규정 완화	현행 규정 유지	

< 참고3 >

SP/SSM 관련 G33 제안 내용

1. G33 SP 관련 제안 내용

1) SP 선정 관련

○ 부록(Annex)에 나열된 지표(indicator)*에 의거하여 세번의 최소한 20%를 특별품목으로 스스로 선정(self-designate)

- 지표 중 적어도 하나만 해당되어도 SP로 선정 가능토록 함

  * 지표(indicator)관련 구체적 합의내용 후술

○ 원료농산물을 SP로 선정시 이를 이용한 가공농산물도 SP로 선정 가능

○ SP선정에 있어 사전배제 불가(no a priori exclusion)

2) SP 대우 관련

○ SP품목 관세감축방식(3단계: 0~10%)

i) SP품목의 최소한 50%는 관세감축 면제, 또한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15% 추가적으로 관세감축 면제 가능

ii) 25%는 관세 5% 감축

iii) 나머지는 관세 10% 감축

○ SP품목은 새로운 TRQ 설정 및 관세상한 설정 불가

○ SP품목에 대해 SSM 설정 가능

3) Indicator 관련 합의내용('07.3)

No.	지표 내용
1	법, 규정, 행정지침에 따라 기본 식품군의 일부로 지정되거나, 주식으로 지정된 것 또는 영양가 또는 1인 1일당 열량공급도가 높은 품목
2	자급도가 높은 품목
3	국내소비가 전세계 수출량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품목 또는 전세계 수출시장에 있어 최대 수출국의 비중이 큰 품목
4	전체 생산량에 있어 소규모 농가(10ha 이하이거나 평균 농가규모 이하)가 생산하는 비중이 큰 품목, 또는 소규모 농가(20ha 이하이거나 평균 농가 규모 이하)의 비중이 큰 품목
5	고용 비중이 큰 품목
6	취약 생산 농가(부족집단, 여성 및 고령농, 저소득농, 자원부족농, 자급농, 조건불리농)의 비중이 큰 품목, 또는 조건불리지역(가뭄·구릉·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큰 품목
7	농업총생산(GDP) 또는 농업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8	가공 비율이 낮은 농산물, 또는 수공예, 가내수공업 등 농외경제활동과의 연계를 통하여 농촌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9	관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10	가구당 식품구입비 또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11	다른 회원국이 품목특정 AMS 또는 블루박스 보조를 지급하면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
12	노동 생산성 또는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낮은 품목

2. G33 SSM 관련 제안서 구체내용

1) 물량발동기준

○ 당해연도 수입량이 3개년 평균수입량의

- 105%이하인 경우: no additional duty
- 105%초과 110%이하인 경우: maximum additional duty는 양허 관세의 50% 또는 40%p중 높은 것
- 110%초과 130%이하인 경우: maximum additional duty는 양허세율의 75% 또는 50%p 중 높은 것
- 130%초과인 경우 : maximum additional duty는 양허세율의 100% 또는 60%p 중 높은 것으로 함

2) 가격발동기준

○ 수입가격이 이전 3개년 월평균 수입가격보다 낮은 경우

- 만약, 12개월 동안 국제통화보다 20%이상 평가절하되었다면 수입가격 계산시 평균환율 적용

○ 선적기준 : 매 선적분의 수입가격과 가격발동기준과의 차이 내에서 추가관세부과

○ 종가세 기준 : 추가관세는 해당 선적분의 수입가격과 가격발동기준과의 차이를 비율로 환산한 것보다 커질 수 없음

주요 나라와 FTA 협상, 어떻게 하고 있나

국제농업국 FTA 1과장 박창용

우리나라에서의 FTA 추진은 1998년 11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주요국가들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기존 수출시장 확대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경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및 개방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나라와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FTA를 추진함에 따라 세계 각지역으로 FTA가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과 FTA를 기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아세안과는 상품교역분야 협상 타결을 완료하고 국회 동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가장 거대한 경제권중의 하나인 미국과의 FTA를 비롯하여 인도, 캐나다 등과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과는 상품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로 2004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제6차 협상이후 중단된 FTA협상 재개 문제를 서로 조심 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아울러 EU와는 2006년 7월과 9월에 2차례 예비협의를 마치고 2007년 상반기부터 FTA협상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는 FTA관련 공동연구를 완료하였다. 또한 중국과도 2007년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되었으며, 호주·뉴질랜드와는 2007년도 중에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결정('06. 12월)하는 등 여러 나라와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기타 주요 국가들과의 FTA 추진동향은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는 2005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협상 이외에 열린 원산지 협상, 관세 및 원산지

이행위원회 등을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횟수가 진행된 셈이다.

아세안연합은 당초에 주요 6개국(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 필리핀 · 태국)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가 CLMV(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남)라는 후발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소득 2만 8천 달러의 선진국이나 라오스 · 미얀마의 경우 2천 달러 미만의 세계 최빈국에 속한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경제연합이라고는 하지만 각국의 경제발전(GDP 수준)이나 문화 · 인구 및 생활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성격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별 품목별 원산지 협상은 고사하고 '원산지 일반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것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웠다. 단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간 FTA에서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나 10개국을 포함 하고 있는 아세안의 경우 아세안 내부적 합의도출이라는 선결조건이 요구되므로 더 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다.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05년 12월 양측 정상은 상호간 관세인하 방식에 합의하였고, 한국은 관세철폐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초민감품목으로 200개(HS 6단위 기준)를 확보하였으며, 1년 이상의 밀고 당기기 협상 끝에 '06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1차 협상에서 상품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가장 민감하다고 취급되는 농산물은 양허제외(71개)로 설정하였다. FTA의 기본원칙이 상호간의 관세철폐임에도 불구하고, 양허제외로 설정된 품목은 관세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0년간 양허를 제외하다가 관세일부를 감축하는 품목으로 226개를 설정하는 등 초민감품목군으로 297개(HS 10단위 기준)를 설정하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가공농산물 등 151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2012년 20%로, 2016년 5%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06년 8월말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양측은 FTA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잔여쟁점으로써 서비스 · 투자협상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방의 형태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서 개방할 부분만을 목록화하는 방식(Positive List Approach)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농림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목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서비스 · 투자분과까지 최종 합의는 '07년 11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06년 11월 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관세 및 원산지 이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협정문 발효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동 이행위원회에서는 변경될 2007 HS 개정사항에 대해 관세 및 원산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 현재 한·아세안 상품협정문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로서 국회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중 비준이 이루어져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 협상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

한·인도 CEPA 협상은 2004년 10월 양국 정상이 CEPA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양국의 산·관·학으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의 설치에 합의하므로써 검토가 개시되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그룹회의 개최 결과, CEPA 협상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협상은 2007년 타결을 목표로 2006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07.1월까지 5차례 개최된 협상을 통해 양국은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 통관)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부문에 걸쳐 통합협정문 작성에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상품분야 협정문안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하였다.

상품 자유화 방식에 있어 양측은 모두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양국의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상품의 7%에 해당하는 품목을『양허제외』에, 5%에 해당하는 품목을 『관세 50%감축』 유형에 배치하고, 반면 인도는 15%에 해당하는 품목을『양허제외』에, 5%를『관세 50%감축』 유형에 배치한다는데 양측이 잠정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07.4월로 예정된 제6차 협상에서는

상품 자유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자급자족적 농업 형태에 하부구조도 열악하고, 우리나라로의 농산물 수출 규모도 약 2.3억불('03～'05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인도의 대세계 농산물 수출실적을 고려할 때 교역 잠재력은 크다고 예상된다. 또한 인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농림수산업 외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감 농산물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어 농산물 양허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50%감축』 유형에 농산물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도측에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한·인도 CEPA 타결로 인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캐나다 FTA

2005년 7월 15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 통상장관이 한-캐나다 FTA 협상 출범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캐나다가 칠레, 싱가폴, EFTA에 이어 한국의 6번째 FTA 협상 파트너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한발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로 적은 조정비용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는 2004년 현재 세계 제8위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와 FTA를 맺고 있다. '05년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감귤, 배, 파스타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돼지고기, 밀, 우지, 유장, 감자, 유채유 등이다.

한·캐나다 FTA협상은 '05년 7월부터 '07년 2월까지 9차례 진행되었지만 상호 기대하는 양허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업협상이 평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PT) 수혜국으로서 캐나다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관세는 무관세이거나 10%이하의 저율관세가 부과되어 있을 뿐이다. 반대로 캐나다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액 규모는 한국보다 약 10배 이상 많고 대부분 고관세 품목이라 캐나다로서는 우리나라의 관세 양허를 통한 실질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더욱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8차 협상까지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캐나다측은 '02~'04년 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99%이상 양허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보리·대두를 비롯한 일부 곡물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 품목들을 정치적 민감성과 생계유지형 농가를 이유로 양허 제외나 비교적 장기관세철폐로 분류하였다. 우리측 농산물 양허율은 현재 수입액 기준으로 62.6%로 캐나다측 기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이외 공산품·수산물·임산물 등 비농산물 분야에서도 양국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난 8차 협상부터 상품분과내에 농산물 등 4개 소분과를 설치하여 양허협상을 진행하였다. 금번 9차협상 기간 중 농업소분과에서는 농산물 양허안 개선방향과 개별 품목현황 등 양허안과 농업관련 쟁점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농산물 양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15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관세일부감축, 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과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s)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하였다. 개별 민감품목 논의시 캐나다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겉보리, 쌀보리, 대두 등 일부 곡물에 대한 양허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쇠고기는 한우시장과 수입쇠고기 시장의 분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제적 분석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며 양허개선을 촉구하였다.

농업소분과에서 일부 논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수산물·임산물 소분과에서 논의 진전이 거의 없어 양허협상을 상품분과로 환원하였다. 상품 전체분과에서 양측은 차기 협상에서 최종 양허안 타결을 목표로 양측 관심 품목을 반영한 3차 양허안과 추가 양허요구품목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의 핵심은 양측이 상대국 관심품목을 얼마나 양허할 지에 달려있다. 한국측 관심품목으로 10년 양허로 분류된 승용차를 캐나다측이 3년 이내 단기로 재조정할 지 여부와 캐나다측 관심품목인 쇠고기·돼지고기를 한국이 양허할 지 여부에 달려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 쇠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0차 협상은 4월말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EU FTA 전망

인구 4억 8천만 명과 GDP 1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력을 보유한 거대한 단일시장인 EU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EU와의 FTA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EU는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협의를 갖고 FTA 추진 관련 양측의 입장과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현재 EU는 이사회로부터 한국의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며 우리측도 EU 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정식으로 EU와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농업 흐름 분석

2007년 미국 농업 통상환경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정명희

◇ 미국은 세계 제1위의 무역국가이며 WTO 도하 협상 타결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여타 WTO협상국들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역이 최근 국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Ⅰ. 미국의 정치상황

1 미국인은 더 이상 무역이 미국경제의 중심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 여타 다른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무역에 의한 수출이 아닌 농가경제 분야(farm economy, not exports)에 국내적 요구가 증가하고, 수 없이 많은 여론존사와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인은 경제번영을 위해 무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의회 또한 도하협상 타결 여부에 대한 관심 및 부시 행정부와의 타협에 소극적이다.

2 공화당에서 민주당 주도로 바뀐 의회는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선출될 것을 기대, 차기 대선이 있을 2008년 까지 기다려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 임명을 희망하고 있다. 그 시기까지 의회는 TPA 연장에 동의할 것 같지 않아 보이며 농업분야 타협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새로 개정될 농업법(Farm bill)은 WTO협상상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지난 1월 31일 미국 농무부 장관 마이크 존핸스는 새로운 농업법을 발표하였다. 의회가 금년 7월까지 농업법을 통과시킬 것이 예상되지만, TPA 종료일은 얼마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여 연장이 불가능 할 것처럼 보인다. 만약 도하협상이 타결되면 의회는 WTO 규정에 맞게 농업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법 논쟁은 국내 정치의 거의 모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미국무역대표가 WTO 무역협상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즉, 무엇을 주고 받을지(give and take)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다.

4 WTO협상에 관한 제조업, 소매업 및 서비스 분야의 관심은 어떠한지?

○ 농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DDA의 빠른 타결을 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미 제조업연맹(U.S.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은 행정부에게 계속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은 미국 GNP(Gross National Product)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농업 때문에 다른 산업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Ⅱ. 새로운 농업정책 제안

1 새로운 농업정책은 어떤 모습이며 무엇이 첨가 되었는가?

○ 국내 농업 프로그램 개혁과 관련한 부시행정부의 농업정책은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농무부 장관 마이크 존핸스가 지난 1월 31일 일부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 했지만, 며칠 뒤 부시행정부는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발표하였다. 행정부 내부에서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의회는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듯 하다.

○ 우선, 가장 커다란 쟁점인 보조금 즉 생산제한하의 감축보조(Amber box)를 보면 이 보조는 국제가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의 보조금은 자동적으로 감축되고, 이에 따라 미국이 Amber box 한도를 쉽게 준수 할 수 있게 된다. 도하협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존핸스의 제안 중 몇 가지 중요한 점 중의 하나가 직접지불 프로그램이다. 제안서에서 직접지불 프로그램을 향후 10년동안 55억달러 추가 예산을 배정, 지출한도액이 없는 허용보조(Green box)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많은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제안을 현실에 옮길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WTO나 도하 제안서에서 미국정부의 지출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 두 번째는 2002년 생산자에게 최소 가격을 지지해 주는 경기상쇄 직불금(Counter-cyclical Payment:CCP)의 구조 변경에 대한 제안이다. 지불 기준을 시장가격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대체하고 고정된 가격, 기준 면적 및 물량을 사용함으로써 Amber box로 분류되지 않아도 된다. 결정되어진 기준선(determined baseline)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불금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로 분류할 수 있으나 지불금은 매년 가격과 물량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어떤 분야 혹은 지역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인가?

○ 위에서 언급한 현행 보조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몇 안 되는 남부지방의 면화와 쌀 산업종사자들이다. 농업법 개정안은 면화와 쌀 생산업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특히, 사적 농업 경영(individual farm operations) 보조금 규모 제한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쌀과 면화 생산자들이 가장 커다란 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Ⅲ. 광범위한 윤곽

1 생필품(commodity) 가격 상승과 미국무역대표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2007년에도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에서 추출되는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는 것과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생 경제국의 생필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과거 몇 년 동안 생산비보다 낮은 옥수수, 콩 및 밀의 가격은 보조금 증가를 초래하여 국내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에탄올 생산 증가는 옥수수 및 여타 작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높아진 시장가격은 보조금 지급 감소를 유발한다. 2005년 옥수수 가격이 낮아졌을 때 농업보조금이 갑자기 증가하였다. 이는 에탄올의 강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240억 달러(2006) → 160억 달러(2007 예상))

○ 2007년도에도 보조금 지급이 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 수요는 옥수수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1부쉘(약 27.2kg)당 2.6달러(2006.9월) → 4.2달러(2007.3월)) 옥수수 생산업자들이 많은 이득을 취득, 콩 생산업자들은 옥수수를 생산, 콩 생상은 감소되고 콩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1부쉘당 5.63달러(2006. 9월) → 7.28달러(2007. 3월))

○ 생필품 수요 증가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아시아의 사료용 작물의 수요 증가 특히 중국의 수요 증가가 커다란 요인이며 또한 호주의 밀 생산 감소가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많은 의회 위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높은 가격이 어느정도 기간동안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특히 의회 지도자들과 대통령은 새로운 연료 기준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향후 10년 안에 5배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농업현황 및 정책 개요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사무관 김민아

< 농업분야 주요 내용 >

◇ 농식품부문(원료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포함)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

○ **'05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262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약 211억 달러

○ 주요 수출품목은 곡물·유지식물(oil-seed)·쇠고기 등이며, 수입품목은 과일·채소·음료 등임

◇ **농업부분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21%**('05년)로 증가추세

○ 주 보조품목은 우유(PSE 58%), 쇠고기(21%), 밀(17%) 등임

◇ **'06년 농산물 평균관세는 22.4%**이며, 비농산물 평균관세의 약 6배

○ SSG품목(세번)수는 150개이나 **'03~'05년 사이 SSG발동은 없었음**

○ **TRQ품목**은 **21개**로 **낙농품, 가금류, 조란, 밀 등**이 있음

◇ 2002년 6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21세기 농업 및 농식품정책에 대한 기본 협정(일명, the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을 체결

◇ 연방 및 지방정부는 **농식품부분 보조에 약 74억 달러를 지출('04~'05년)**

○ '01년 AMS는 28억 달러이며, 허용보조(green box)는 17억 달러

○ 소득보조로는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CAIS)**과 생산보험이 있음

○ **낙농품·가금류·조란에 대한 가격보조**는 여전히 주요 보조수단임

○ 수출보조는 감축하여 **'05년 현재 유제품에 대해 9천만 달러 보조**

◇ 주요 국영무역기관으로는 **밀위원회(Canadian Wheat Board : CWB)와 낙농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 : CDC)**가 있음

1. 농업현황 및 무역현황

캐나다에서 농식품부문(원료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포함)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기준 8.1%수준이며, 농산물 수출액은 262억 달러로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곡물·유지식물·쇠고기 등이 있다. 또한 농산물 수입액은 약 211억 달러이며, 과일·채소·음료·곡물 및 유지식물이 주 수입품목이다.

캐나다의 농업부문 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살펴보면, '01년 16%에서 '04~'05년 21%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위생 및 기후문제로 인한 임시적 보조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에 있어 주 보조품목으로는 우유(PSE 58%), 쇠고기(21%), 밀(17%) 등이며,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캐나다의 농업부분 보조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OECD 평균 PSE는 30%)

캐나다의 '06년 농산물 평균관세는 22.4%로 이는 비농산물 평균관세의 약 6배 수준이며, SSG품목수는 150개이나 2003~2005년 사이에 SSG를 발동한 실적은 없었다.

	평균관세율 (%)						
Description	세번수	MFN	USA	Mexico	Chile	Costa Rica	Israel
Total	8,455	6.5	2.6	2.6	2.5	3.5	3.1
HS 01-24(농산물)	**1,286**	**21.2**	**16.5**	**16.6**	**16.3**	**16.7**	**20.3**
HS 25-97(비농산물)	7,169	3.9	0.1	0.1	0.1	1.2	0.1

또한 캐나다의 경우 TRQ품목은 21개가 있으며 낙농품, 가금류, 조란, 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TRQ품목의 out-of-quota 관세는 129.1%, in-quota 관세는 3.1% 수준이며, TRQ관리는 선착순, 과거 수입실적 기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TRQ 수입이행실적을 보면, '05년의 경우 밀, 보리, 쇠고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체 TRQ물량이 수입되었으나 우유·크림 등 유제품의 경우는 국내 수요 감소 및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03년 이후 TRQ 수입이행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FTA 체결시 in-quota물량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FTA체결국에 대해 WTO협정상의 in-quota물량에 있어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in-quota물량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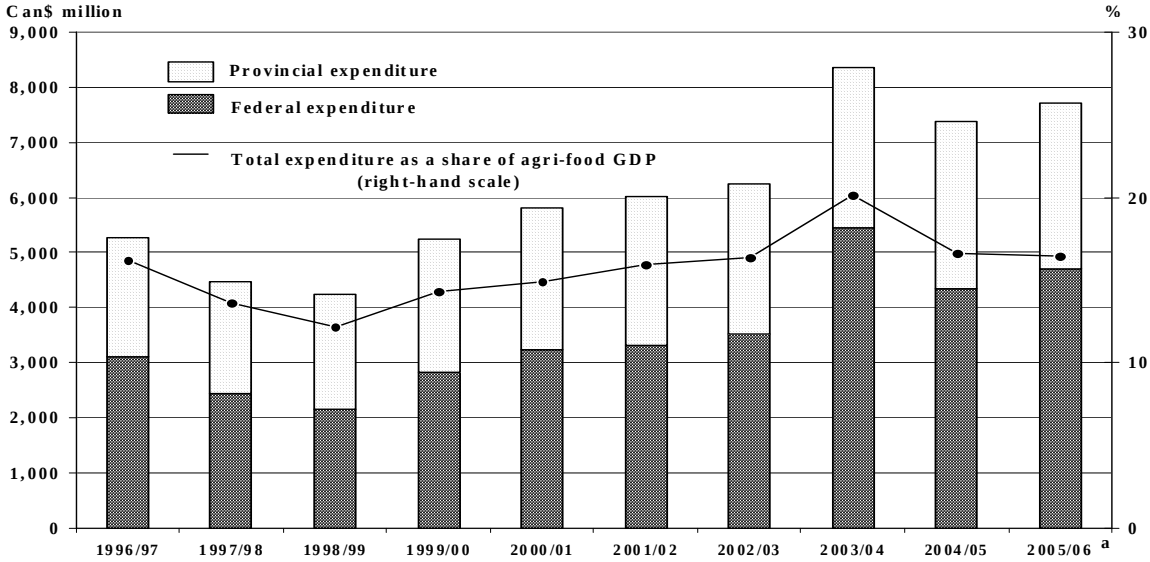
캐나다는 또한 품질관리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과일과 채소 수입에 있어서는 품질·표시(labelling)·포장·안전성 등 요건을 충족토록 하고 있다. 이중 특히 사과·양파·감자 등의 경우는 수입시 식품조사청(CFI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내 농업 보조정책

2002년 6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21세기 농업 및 농식품정책에 대한 기본 협정(일명, the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을 체결하여 2008년까지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은 리스크 관리(농가소득보조), 식품안전 및 품질 제고, 농업의 과학화, 환경보전, 경영회복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약 52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보조금 규모를 보면, 농식품부분에 약 74억 달러를 보조지출('04~'05년)하였으며 이중 연방정부 예산은 43억 달러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01년 허용보조(green box)는 17억 달러, AMS는 28억 달러 수준이다. 이 중 AMS의 경우 WTO협정시 양허수준인 43억 달러에는 미치지 않으나 '99~'00년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이는 주정부 프로그램 및 가뭄대책에 따른 보조 지출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Chart IV.1
Government expenditure in support of agri-food, 1996-06



a Estimate.
Source: WTO Secretariat, based on data in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06), *Farm Income, Financial Conditions and Government Assistance Data Book*, April. Viewed at: http://www.agr.gc.ca/.

품목별 보조현황을 살펴보면 낙농품·가금류·조란에 대한 가격보조가 여전히 주요 보조수단이다. 캐나다 우유공급조절위원회(CMSMC : Canadian Milk Supply Management Committee)는 2개월마다 우유 생산목표(쿼터)를 설정하여 각 주에 배정하고, 각 주의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 and agency)는 당해 생산쿼터를 생산자들에 배정하여 기 설정된 가격에 따라 우유를 구입·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보조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programme : CAIS)과 생산보험(Production Insurance)이 있다.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CAIS)은 생산자의 소득이 최근 5년간의 평균 소득수준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하여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2003.12월에 시작되었다. CAIS에서 각 생산자들은 소득 보장수준(100%/85%/70%)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03~2006년 사이 이러한 CAIS 프로그램에 약 36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04년 현재 전체 농가의 약 57%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보험(Production Insurance)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조로,

2003.4월에 시작되어 '03~'06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약 16억 달러 지출하고 있다.

3. 수출보조

캐나다는 WTO협정에 따라 곡물·유지작물·낙농품·채소 등 11개 품목에 대해 시행하던 수출보조를 감축하고 있는 바, '00년부터 4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매년 보조수준을 감축하여 '05년 현재 버터,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해 9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4. 국영무역현황

캐나다의 주요 국영무역기관으로는 밀위원회(Canadian Wheat Board : CWB)와 낙농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 : CDC)가 있다.

밀위원회(CWB)는 1935년 설립되어 주로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밀 및 보리에 대한 수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약 7만 명의 생산자들로부터 밀 및 보리를 구입하여 매년 약 1,650만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교역량의 약 20%수준이다.

2003.3월에 밀위원회(CWB) 등 캐나다의 무역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WTO패널이 설치되었으나, 동 패널은 CWB 수출제도가 GATT 1994의 무차별원칙 및 시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밀위원회는 여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낙농위원회(CDC)는 유제품의 구입 및 포장, 유통, 저장, 선박, 수입, 수출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일본의 21세기 신농정

농림부 일본농업연구회

Ⅰ. 국제전략

1. WTO농업협상 및 EPA협상 적극적 추진

WTO와 EPA(경제연대협정) 협상은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공세로 나설 것은 공세를 취한다」라는 자세로 전략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균형이 유지된 무역규범이 확립되도록 지향하고, 동시에 국내농업의 구조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EPA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에 임한다. 협상에서는 일본과 상대국의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대국가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식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질 높은 EPA 실현을 추진한다. 또한 상대국과 지역에 따라서 안정적인 식료무역에 관한 협정 등의 방책을 폭넓게 검토한다.

2.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전략적 추진

일본이 중점적으로 시장개척을 해야 할 국가와 지역별로 적절한 수출전략을 책정하고, 민과 관이 일체가 되어 일본식문화의 해외 보급, 전략상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촉진활동 지원, 수출장해 요인의 제거, 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목표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을 5년간 2배로 증가 ('04) 2,954억엔 → ('09) 6,000

3. 동아시아 식품산업 공동체 구상

국내 시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정체되는 반면, 인근에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매력적인 동아시아 시장이 존재한다. 이들 시장은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에 착안, 지금까지의 발상을 전환하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해외진출시에는 공세적인

EPA추진전략과 연대하여 일본 식문화의 해외보급, 수출촉진전략, 지적재산권과 브랜드 보호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한다.

목표 : 동아시아(중국, 대만, 한국, 아세아 6개국)에 일본 식품산업 현지법인 활동 규모를 5년간 30～50% 증가

매상고 : ('05) 84억불 → ('10) 110～ 125억불

4. 지적재산권의 보호·활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일본의 우수한 농림수산물과 식품을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여 권리화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품종보호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육성자 권리침해 품목의 수출금지제도 추진, 해외의 육성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 활용한다.

목표 : ① 식품신품종의 출원건수 : 5년간 1.5배(2,000건) 증가, 심사기간을 '08년도에 세계 최단기간(2.5년)으로 단축('04년 3.1년)

② DNA 품종식별 기술 : 2010년까지, 가공품(쌀, 딸기), 쇠고기 분석기법 개발

* 쌀 및 딸기 수확물의 분석기법은 기 개발완료

Ⅱ. 국내농업의 체질강화

1. 경영체 육성·확보와 신규참입의 촉진

의욕과 능력있는 경영체에 한정된 품목횡단적인 경영안정대책을 '07년부터 도입하고, 여성을 포함한 경영체의 육성·확보에 가일층 노력한다. 아울러 지역공동 영농에 의한 농지·농업용수 등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농지·물·환경보전 향상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예산·금융·세제 등 각종시책에 있어서 우수한 경영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공공사업을 포함한 각종사업 시행시에 품목횡단적인 경영안정대책의 대상이 되는 경영체를 확보하도록 요건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나아가 생산기반 정비 시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영체에게 농지가 이용 집적되도록 추진한다.

농업경영에 여성의 참여활성화와 경영자로서의 적정한 평가를 촉진하고, 의욕적인 기업과 비농업부문에서 젊은 층의 신규참입을 촉진한다.

화학비료와 화학합성농약의 사용을 줄여서 환경보전형 농업을 촉진한다.

특히, 2010년도에 농정개혁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목표 : ① 경영체 육성 및 확보

2005년	2015년
○ 인정농업자 : 약 195천명	○ 효율·안정적인 가족농업경영 : 330～370천명
○ 집락영농 : 약 10천개소	○ 효율·안정적인 집락영농경영 20～40천개소
○ 인정농업자의 농지이용집적면적 : 약 50%	○ 효율·안정적인 농업경영 경영면적 : 70～80%

② 일반기업등의 농업참입법인수를 5년간 3배증가 : ('05년)156개 → ('10년) 500

③ 39세 이하 신규취농자수 : 연간 12천명 수준

2. 식료공급 코스트 절감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cost 절감 시스템을 경영체육성 대책과 함께 성역없이 강력히 추진한다. 특히, 농협의 경제사업에 관해서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비교하여 개혁의 부진한데 주목하여 농협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저렴한 농업자재의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물류 코스트 삭감 등 개혁을 철저히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경험있는 유식자의 식견을 활용하기 위한 「코스트 절감위원회(가칭)」를 개최한다. 위원회 활용에 관해서는 PDCA(Plan, Do, Check, Ac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원회 의견을 강력히 반영하는 형식으로 개혁을 착실히 추진한다.

목표 : 식료공급 코스틀 5년간 20% 감축한다.

Ⅲ. 먹거리(食)의 안전성 확보와 바른 먹거리(食) 교육

1.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소비자 신뢰확보에 충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고, 가축과 농작물 등의 병해충의 침입·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노력한다. 또한 소비자의 Needs를 감안하여 JAS규격에 충실(일부 가공식품과 양식어종에

대한 생산정보 공표, JAS규격 제정 등)하고 식품표시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표 : ①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방지·확산방지 및 해외 전염병 침입방지

② 식품표시의 적정화 및 새로운 needs에 대응한 JAS 규격 도입

2. 바른 먹거리 교육의 추진

食育기본법 및 食育추진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바른 먹거리 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이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국민운동으로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과 농촌관광을 연계하여 地産地消를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목표 : ①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사용확대 : ('04) 21% → ('10) 30

②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육farm이 구축된 시정촌 확대 : ('05) 42% → ('10) 60% 이상

Ⅳ. 신분야

1. 기술과 지적재산을 활용한 신산업분야 개척

이제까지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신식품·신소재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향후 잠재적 수요에 맞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기술이전·지역 브랜드 확립 등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시책으로 신비즈니스를 구축한 산지의 형성을 추진한다.

현재 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기능성 농산물 등의 신식품·신소재 시장규모는 약 200억엔 수준이며, 개발중인 화분증 완화쌀 등을 포함하면 잠재적 시장규모는 5,000~6,000억엔 정도로 예측된다. 5년후 시장규모를 700억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 신식품·신소재 시장규모 확대 : ('05) 200억엔 → ('10) 700

2. 바이오마스에서 지구환경에 적합한 자동차 연료

개정된 바이오마스·일본종합전략에 기초하여 바이오에탄올 등의 수송용 연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외의 동향을 조사하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또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에탄올 이용방법 개발, 저렴한 원료농산물의 조달방안 강구, 저코스트 고효율의 생산기술 개발 등으로 국산 바이오마스 수송용 연료의 이용촉진을 도모한다. 나아가 목재생산 시스템과 연계한 목질바이오마스의 종합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목표 : ① 바이오마스 열이용도입 확대 : 원유환산 308만kl(약 760만 co2톤 2010년도 교또의정서 8% 삭감약속의 약 10%)

② 바이오마스 수송용 연료도입 확대 : 원유환산 50만kl(2010년)

Ⅳ. 지역 대책

□ 自考行動하는 농산어촌의 활성화

향후 농산어촌 진흥에는 「치고나가는 농산어촌 유식자회의」의 제언에 기초하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이(에서, 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간의 切磋琢磨*가 농산어촌 전체 활성화를 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많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참가를 촉진하고, 노력과 창의의 장려, 재도전 기회의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농협 등의 의사결정 과정 및 농업경영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남녀공동 참여를 촉진한다.

목표 : 모델사례 농산어촌 발굴확대 : ('04～'05) 60건 → ('06～'10) 250건

* 切磋琢磨 : ① 학문·덕행·수양 등을 닦는데 전심을 기울임

② 뜻을 같이하는 친구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여 진보·향상되어감

중국 WTO 가입 후 농업의 성과와 향후대책 분석

주중농무참사관 정문섭

WTO 가입 전,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중국의 농업을 취약산업으로 간주하면서 현대화된 외국 농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국의 농업이 장기간 분산된 경영이 이뤄져 왔고 현대화와 규모화생산이 어렵고 낮은 농업기술수준에다가 시장시스템 의식이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각양각색의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WTO 가입 후 5년이 지난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농업은 치열한 시장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비록 중국의 농업이 개방되었지만 경쟁력이 증대되었고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업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접근'** 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WTO 가입 후 중국이 농업 분야를 개방할 때 수동적으로 충격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무역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거두게 된 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능동적으로 전략적 조정을 시행한 것입니다. 정부가 글로벌화에 발맞춰 농업 표준화 추진, 농산물 품질 향상, 농산물 전문화 및 지역화 실현 등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켰습니다. 이 밖에 국내외 농업 자원과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료와 자원의 성격을 띤 농산물을 수입하고 노동 집약형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농업 내부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둘째, '삼농(三農)'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이행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2004년부터 연속 4년간 삼농문제를 중앙1호문건으로 선정하여 적극시행하고 관련 중앙재정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WTO 가입과 중국 경제 발전을 통해 농업구조조정의 전환기가 서로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경쟁력이 큰 농산물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WTO 가입한 후 5년 동안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즉 일단 수출의 기회를 열어주었고, 이에 따라 중국 농산물 수출의 연간 성장률이 14%에 달하게 하여 농산물 분야에서 세계 5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원의 구조로 볼 때, 중국의 노동 집약형 농산물은 비교우위가 강한 제품으로서 WTO에 가입한 후 노동 집약형 농산물의 수출액은 눈에 띄게 늘어 농산물 수출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된 것은 농업 자원이 풍부해 세계 시장의 다양한 식품 수요를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이고 중국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므로 중국 농산물 수출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식 농업 발전으로 농업의 수준과 경쟁력이 전면적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10년 안에 무역 자유화가 한층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중국 농산물 수입**은 연간 25%씩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04년에 이미 농산물 순 수출국에서 순 수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 46.4억불, 2005년 11.4억불의 적자를 냈고 2006년에 6.7억불로 적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산물의 수입은 원료 및 자원의 성격을 띤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비교적 일찍 개방된 대두, 수입관세 쿼터의 보호를 받는 면화, 식물성 식용유, 양모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수입은 경지 및 수자원이 부족한 중국에 있어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근본원인은 시장 개방 외에 중국 경제가 이미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의 농업은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중국 농업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수입 압력이 점차 커질 것입니다. 중국 농산물의 수급구조와 농업자원의 특징으로 인해 향후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대규모로 확대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 중국 국내 농산물 가격의 인하는 불가피하며 그렇게 되면 농민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중국 정부의 각종 농업우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직면한 국제 환경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기존의 무역장벽 외에도 선진국이 설치한 기술장벽이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몇 년간 반덤핑, 특별 세이프가드에 대한 조사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고 '지식재산권 장벽', '여론 장벽' 등 신종 무역장벽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셋째, 외국 자본이 중국 농산물 가공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서 외국 자본은 신흥 성장형 농업가공분야를 독점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국내의 중소기업, 지역 경제발전 및 주요 생산지역의 농촌 취업과 농민 소득 증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중국 농산물 가공업은 출발이 늦은데다 내실이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수준과 기술 혁신수준이 낮고 브랜드 제품이 부족하며 수출기업 규모가 작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농업은 글로벌 안목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현대식 농업 건설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합니다. 또한 비교우위를 한층 더 발휘하고 농산물 수출 촉진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 농산물 수입전략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 국내자원 상황을 고려해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국내외 농업자원과 시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국제자원으로 중국의 토지와 수자원 부족상황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전략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수입이 중국 국내에 미치는 부정정적 영향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글로벌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수입규모와 속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농산물 수입 모니터링, 산업손실 예보시스템, 신속반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WTO 농업규칙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반덤핑, 보조금 철폐,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외 농업의 고액 보조금에 대비한 긴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시장의 리스크 방지 및 관리 능력을 키워 중국 농업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적인 경험을 거울로 삼아 상응하는 업계조직과 협회를 세우고 非국유 무역범위 내의 곡물, 식물 식용유 및 대두 등 곡물 및 식용유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마다 하나의 협회를 세운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장려해 글로벌 농산물 공급사슬의 상층부에 진입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섯째, WTO 도하라운드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양자 간 무역협상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세계 농업대국으로서 협상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외 통상 이야기

푸드마일-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인가?

국제농업국 통상협력과장 윤동진

식품이 생산지에서 시장까지 운송되는데 드는 연료, 노동력 그리고 다른 재원들, 소위 '푸드마일'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푸드마일'은 수백,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싸게' 구입되어 전국 소매점으로 유통된 것보다는 로컬푸드(지역산물)를 사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본토박이 농부들과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 개념이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가 영국 토양협회(UK Soil Association) 초안으로, 일정 거리를 넘어서는 지역에서 수입한 식품에 대해서 유기식품이라는 타이틀을 없애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드마일을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관련된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를 추구하다보면 소비자선택의 폭을 좁히고, 다른 국가 경제에 피해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배가 시킬 수가 있다.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로컬푸드가 언제나 최선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최악이 될 수도 있다.

환경 비용 측정하기

생산지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가공되어 또다시 생산지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낭비라고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의 생각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국내 생산·소비되는 제품보다 더 적은 경제·환경 비용을 들이고 생산되어 수입된 식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버터와 스페인산 토마토가 연료·비료·노동력투입· 탄소배출량 등으로 볼 때, 영국 내 생산·소비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푸드마일과 관련한 더 광범위한 의미의 경제·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개도국 경제성장을 돕는 책임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소비자들이 제철이 아닌 야채, 과일, 꽃을 필요로 할 때, 가난한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이를 공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부유한 유럽 환경론자들의 지나친 환경보호 강박관념 때문에 이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IIED)의 James MacGregor 와 Bill Vorley의 말을 인용하자면, "개발과 빈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에 농산품을 생산·수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푸드마일은 종종 개도국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유익을 간과하게 한다.".

수입반대켐페인

물론, 푸드마일 개념은 과거 CAP(공동농업정책)의 혜택을 입고, 오늘날 식품시장의 규제가 철폐되어 손해 볼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다.
뉴질랜드산 버터에 맞서는 영국 Dairy Crest의 광고를 보면 이러한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다. 2006년 광고를 보면 영국산 유제품이 뉴질랜드산 폰테라(Fonterra)사의 버터보다 환경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뉴질랜드산 버터가 오클랜드에서 영국틸버리(Tilbury) 항구까지 17,500Km를 건너옴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으로 따지자면, 영국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Dairy Creset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배가 녹이 슬든 어쨌든 해상교통은 연료비용도 가장 적고, 이산화배출량도 가장 적은 운송수단이다.
뉴질랜드 링컨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유고형분 1톤을 생산하여 해상교통을 통해 영국으로 운반할 때 드는 에너지가 영국내에서 소요되는 것의 반을 살짝 넘는 선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 절반도 안된다.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독립 자문기관인 AEA Technology plc에서 실시한 푸드마일 관련연구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국내수송

DEFRA 연구에 따르면, 식품산업의 환경비용 증가는 요즘은 감소하고 있는 국내 생산 투입재 증가나 수입된 상품의 운송부담 때문이 아니라, 국내식품 유통양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식품 구입처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형수송트럭(HGV)이 도로를 통해 각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로 식품을 운반하는 새로운 유통방식이 생겨났다.
소매상점들이 점점 대형마트들로 대체됨에 따라, 수시로 가게를 드나들던

뚜벅이 소비자들이 사라지고 주단위로 몰아서 쇼핑을 하는 모터족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영향으로 영국에서 HGV로 운반되는 식품의 양은 1978년이후 23% 증가했고 각 운반시 평균 거리도 50%가량 증가했다.
DEFRA 보고서에 따르면, '푸드마일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대기오염, 교통체증, 교통사고, 소음 등 환경·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명확하며, 다시 말해 대형트럭사용이 여러 가지 영향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영국내 시장에서 식품 운반에 따른 총 사회비용이 91억2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에서 수입해서 시장으로, 소비자를 시장으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74억4천만 파운드가 길에 뿌려지는 비용이다. 뉴질랜드산 버터와 양, 호주·아르헨티나·브라질의 소고기 그리고 북미의 유지작물과 사료용 곡물을 운반하는 데 드는 해상교통비용은 1억6백만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야외재배 토마토

DEFRA 연구는 또한 영국 소비자가 국내산이 아닌 스페인산 토마토를 사는 것이 환경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말한다. 토마토 성장의 최적 온도는 16~21 C° 선으로, 영국의 온실하우스는 토마토 1kg 11kwh 비율의 가스연료를 사용하여 재배 적정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스페인의 토마토는 야외에서 재배된다. 운송·가공·포장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도로를 이용한 스페인-영국 운송을 제외하면 두 나라간 별 차이가 없다. 운송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영국내 토마토 재배 및 운반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톤당 2,394kg 계산되었고 스페인산은 톤당 630kg에 불과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환경론자들이 과도하게 교통비용을 줄이는데 매달리다보면, 생산지의 천연자원(뉴질랜드·스페인의 토마토 재배에 적합한 기후)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질 비교우위나 이용 교통수단에 따라 환경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게 된다.
선진국 소비자들이 개도국의 식품을 비싼 돈주고 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이유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하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비행기를 통해 운반된 신선한 식품은 비록 환경비용이 든다고 해도, 후진국이 가진
유일한 자원 즉, 비옥한 땅과 연중 따뜻한 기온을 이용하여 낙후된 농촌 경제를 살리는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수출

IIED에 따르면, 아프리카 농촌의 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과일·화훼·야채(FFV)의 영국수출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아프리카 농촌경제규모는 약 2억파운드에 불과하다.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FFV를 수입하는 것은 비슷한 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조건이라면, 영국내 6천만의 거주민보다, 후진국의 생계를 도와주는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푸드마일 측정방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환경 피해를 감축하는데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특별 기고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배종하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다.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세계화는 피할 수 없고, 우리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한다. 누가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삶이라면 개인적 성향이 삶의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고 개인에 따라 그 좌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국가로서의 선택은 하나 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세계화’이고 ‘개방’이다.

‘렉서스(Lexus)’가 번쩍거리는 시대에 ’올리브나무(olive tree)’를 고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국가의 선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세계 최고를 뽐내는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60년대 형편없는 개도국에서 2000년대에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온 국민의 엄청난 노력과 피땀으로 ‘올리브 나무’에서 시작해 ‘렉서스’를 만들어낸 대단한 국가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렉서스’는 더 빛이 나 보인다.

이처럼 ‘렉서스’가 위용을 뽐내는 사회에서 농업은 아직도 ‘올리브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물론 농업이라고 해서 ‘렉서스’가 되지 말란 법은 없고 실제로 농업에도 많은 ‘렉서스’가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느리고 숫자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우리 농업도 ‘개방화, 국제화’의 길을 많이 걸어왔지만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있고 경쟁력이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 부단하고 비상한 노력을 통해 개방에도 끄떡없는 농업도 있지만 농업이란 산업이 자연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에 품목에 따라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태생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이하로 떨어졌고 국가 전체 재정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현란한 '렉서스'가 위용을 자랑하는 시대에 '올리브 나무'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져 우리는 해마다 늙은 '올리브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WTO 협상, 당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우리 사회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한미FTA, 이 가운데는 어김없이 제일 자주 등장하는 화두가 농업이고 지금도 한미FTA가 타결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타격을 받는 산업이 농업이 될 것이란 점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개혁과 변화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엔 온갖 종류의 삶이 공존하고 그 중에는 개혁과 변화가 힘에 부치는 사람들도 있다. 개혁에서 소외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세상의 한 모습이라면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그 목소리를 배려한다면 우리의 속도는 그만큼 늦어져 빨리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일 잘 하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힘들어하고 어느 하나라도 남보다 뒤지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란한 '렉서스'의 위용에 비교하면 '올리브 나무'는 삶을 피곤하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애물단지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올리브 나무'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올리브 나무'가

다 사라지고 판에 찍은 듯 똑 같은 ‘렉서스’만 남아있는 세상은 아니지 않을까?

해외 통상 기사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 멕시코 경제세미나에서의 연설문

○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멕시코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멕시코는 바쁘고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도시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2005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저는 다시 이 곳을 방문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도하협상에 대해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현재 도하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 멕시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속의 아즈텍(멕시코 원주민), 비 그리고 농업의 신들까지도 우리를 도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 2001년 도하 카타르에서 협상이 시작된 이래 협상이 쉽게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저는 2003년 개최된 칸쿤 각료회의에서 도하협상의 성공적 타결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네바 2004 기본골격 합의, 2005 홍콩 각료회의와 같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작년 7월에는 도하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협상 중단 또한 과거 일련의 성과물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우리는 협상이 재개되었는데 이는 협상국들이 여전히 도하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작업 및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 현재까지 진척 상황 〉

○ 금년 2월 이후,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협상국가들은 양자

간 협상에서 주요 수출 관심품목과 수입 민감품목 범위(numbers) 타협점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및 인도는 런던과 제네바를 오가면서 각료급 양자협상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저께도 저는 (3.21일)자카르타에서 개발도상국 그룹(G-33)의 각료들을 만나 농업분야의 세부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회동을 통해 저는 가설(hypothesis), 공식(formulae)등의 분야에서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회동은 도하협상의 진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늦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협상국들은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Time is not on our side, and many WTO memb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atient). 우리는 협상을 가속화하여 6월말(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만료일)까지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 도하라운드 타결 가능성 〉

○ 아울러, 저는 도하협상에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현재 3가지 쟁점들(농업보조금, 농업분야관세 및 산업분야관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우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물은 비록 성공적 결론에 이르기에는 부족하기는 하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관건은 미국의 태도입니다(In this part of the negotiations, the ball is very much in th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은 더 큰 폭의 농업보조금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타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 감축을 할 것입니다.

○ 농업 시장 접근(농업분야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주로 유럽연합(EU)와 G-10(농산물수입국 그룹)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현재의 입장을 넘어서서 더 큰 폭의 관세감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

및 G-33(개발도상국 그룹)국가들도 이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해야 합니다.

○ 산업분야 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통상적으로 NAMA혹은 비농산물 시장접근이라 불리 우는데 주로 브라질, 인도 및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G-20(개발도상국 그룹)국가들이 수입관세를 감축해야 합니다.

〈 결 론 〉

○ 도하개발 아젠다는 1995년 WTO가 창립된 이래 가장 커다란 도전(challenge)입니다. 이 도전은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는데 농업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하개발 아젠다는 정말 힘든 도전인데 그 이유는 각 협상국들의 가장 변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It is a challenge because it touches the edge of some of our Member's most entrenched interests).

○ 그러기에 도하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아주 커다란 정치적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결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노력입니다(This is the final stretch). 마지막은 항상 가장 힘든 부분이며 인간의 노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말련 FTA 잠시 중단

USTR은 미국-말련 FTA협상을 잠시 멈춘다고 지난 주 금요일 밝혔다. 두 나라는 거의 1년 동안 협상해왔다. USTR 성명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 걸친 협상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수 없으며, 말련은 정치계가 FTA에 대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하고, 많은 쟁점도 남아 있다고 전하였다. <중략> 또한 성명에서 그 동안 협상을 잘 해왔으며, 협의는 4월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말련 완와르 이브라임 부총리는 이번 주 워싱턴에 온다. 말련 관리에 따르면 두 나라가 마지막 협상을 마치고 나서, 각료들이 시간을 더 갖고 FTA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쟁점을 살피기로 했다고 전했다.

USTR은 협상이 잠시 멈추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협정을 빨리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질이 좋고, 모든 분야를 담은 협상으로 두 나라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트레이드데일리, 3.26>>

어두운 DDA 농업협상

지난 금요일 팔코너 WTO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비공식 협의에 대해 비관적(somber)인 메시지를 남겼다. 협상국들의 참여가 결여되고 주요 협상국가들 사이에서 개최되어 지고 있는 물 밑 외교에서도 성과가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팔코너 의장은 수차례 개최되었던 고위급양자회의(fireside chat)에서 특별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선진국들(industrized countries)을 위한 어떠한 틀(framework) 없이 개발도상국들(developing countries)을 위한 관세 감축 구조를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특별품목에 대한 유동성을 요구하는 협상국들에게 특별품목 이슈가 단순히 경제적(commercial) 측면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측면 때문인지 질문하였다. 만약 경제적 측면 때문이라면 다양한 제안서의 주의 깊은 평가로 인해 복잡한 쟁점들이 대두 될 것이며 만약 정치적 측면 때문이라면 논의대상이 적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EU는 케언즈가 쌀, 설탕, 양차, 화훼 및 담배 등을 포함한 열대작물을 민감품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 표명하였다.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 3.26>>

유럽연합(EU) 케언즈 그룹의 민감품목 제안에 반대 입장

EU는 케언즈 그룹(농산물 수출국 그룹 : 캐나다, 호주, 브라질, 칠레 등 17개국)이 최근에 발표한 민감품목에 대한 제안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케언즈 그룹의 제안 내용은 deviation*을 두 개로 나누고, 각각에 서로 다른 TRQ(저율관세쿼타) 증량을 적용하였다. 즉, deviation이 커지게 되면 TRQ도 증가하고 반대로 deviation이 작게되면 TRQ도 감소하였다. 일반 관세감축율에서 민감품목 관세감축율이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민감품목 감축율이 적을수록 deviation은 커지고 수입국들에게 유리하다.

(Deviation =(일반관세감축율-민감품목관세감축율)/일반관세감축율)

EU의 농업통상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케언즈 제안은 민감품목대우에 대한 내용의 기본골격에 맞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는 시장접근분야에서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케언즈 그룹의 제안서에 따르면 민감품목 증량을 국내소비량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는 EU가 제안한 수입량 기준에 반대하였다.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 3.21>>

한미 FTA 쟁점 협상(3.19 주간)

두 나라는 이번 주 서울에서, 다음 주에는 워싱턴에서 고위급협상을 연다. 8차 협상까지 풀지 못한 문제를 주로 논의한다고 미국관리가 말하였다.

농업협상팀은 서울에 남아서 쇠고기문제도 이야기 한다. 미국은 한국이 제출한 무역구제 제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할 작업을 하고 있다. 커틀러 협상대표가 3.12 서울 기자회견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비공식 채널에서 나온 회견문에 따르면, 두 나라 협상대표가 다음 주 초 워싱턴에서 만나 협상대상 전체를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커틀러는 앞으로 잘 될 것이며, 다음 주에 나머지 쟁점을 논의할 것이며 고위급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협상이 열리고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쟁점이 많이 해결되지 않은면 그 문제를 고위급에서 협상할 것이다, 고위급에서도 풀지 못하면 각료급이 몇 쟁점에 대하여 관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나라 협상대표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좁힐 것이지만 자동차와 농업분야 대하여 의견 조율이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 문제는 3월 26일 막판에 다뤄질 것이다.이 때가 현행 TPA에 따른 FTA 체결를 의회에 알려주는 마지막 주간이다. 커틀러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다음주에 협상을 해봐야 한다, 두 나라가 워싱턴에서 어떤 진전을 이뤄낼지 두고 보자고 말하였다.

커틀러는 쟁점 협상이 최고위급으로 올라가서 슈왑과 김현종본부장이 마주 앉을 지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안보담당보좌관 해들레이, 국무장관 라이스, 부시대통령 모두 이 협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슈왑과 바티아부대표가 협상에 나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커틀러대표가 한국측이 제안한 무역구제 제안에 대하여 대응결과를 정리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관련하여 한국측에 줄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융통성을 보이기가 어렵다, 내일 비행기를 타고 수요일에 업무에 복귀하면, 바로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이 새롭게 제안한 것을 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누적계산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침해 판정을 결정할 때 중국상품 수입액을 합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지난 해 미국은 한국측 무역구제 제안에 대하여 국내법 수정이 필요하면,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이 협상우선 과제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수정안 역시 보커스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 사이에 이야기가 분분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새 제안이 뜻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다른 나라보다 많으면, 최소한 예외잣대를 높여 주거나 어떤 품목 관련 분쟁이 일어 났을 때 누적 방식을 없애라는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에서는 누적 관련 제안은 넘지 못할 사안이 아니며, 이와 관련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커틀러는 김대표와 자동차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USTR 고위관리가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과 3.9-12 에 만나서 3.1 의회가 제안한 것을 논의하였고, 자세한 정부입장을 알려 주었다. 하원세입위원회 랑겔위원장, 통상소위원회 레빈위원장, 론카인드의원이 제안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커틀러는 USTR이 어떤 제안을 채택하였는지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단지, USTR이 제안하였던 점을 반복하면서 관세, 세금체계, 규정, 투명성 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이 문제와 관련 내부 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 할 것이라고 커틀러는 밝혔다. USTR대변인도 들어 내놓고 이야기 하였는데 “USTR이 의원 제안을 좋게 보지 않으며, 의원 제안은 미국의 관세 감축을 한국 수출 실적과 연동시키고 있다. 한국이 미국 자동차회사를 한국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입실적을 잣대로 놓는 것은 FTA성격에 맞지 않는다, FTA란 관세.비관세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간소식통에 따르면, USTR이 의회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제안은 한국 자동차에 대하여 무관세 수준을 지난 해 미국이 한국시장에 수출한 것만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한국은 비관세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한다.
농업협상팀은 서울에 남아서 협의를 계속한다. 커틀러는 농업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크라우더 농업협상대표가 민동

석차관보와 3.19-21 서울에서 고위급협상을 한다. 이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도 다룬다. 커틀러는 이 협상에서 진전이 많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업계에서 패트릭 보일이 크라우더 대표와 함께 서울에 온다, 보일은 현재 미국정육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쌀>>도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국 생산업자는 쌀 할당량 50,076톤 보다 더 받았으면 한다. 덧붙여, 밥쌀용 판매 비율을 더 늘려 주길 바란다. 2004년 쌀협상에 따르면, 2009년부터 미국에서 들여 오는 쌀 수입분에서 최소한 30%를 도매시장에 내 놓아야 한다. 업계는 밥쌀용 시판이 30% 보다 많았으면 한다. 현재 한국에 들여오는 잔여분은 모두 가공용으로 쓴고 있다. 한국이 2005년 글러벌 수입쌀에서 10%를 밥쌀용으로 시판을 허용하였다. 2009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소식통은 쌀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미국 쌀 가격이 낮아진다고 말한다. 그 만큼 수요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섬유 관련 미국섬유협상대표가 다음 주에 한국측과 만날 지 모른다고 커틀러가 밝혔다. 또한, FTA가 진행되면서 쟁점도 늘어나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8차 협상을 거쳐 많이 진도가 나갔으며, 관련자가 정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USTR은 의회는 물론 업계들 관련자가 말하는 충고, 권유,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커틀러가 선언하였다. 비록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지만, 협상팀은 이를 헤치고, 통관, 정부조달, 경쟁정책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었다, 이제 곧 여덟번째 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한 두가지 쟁점만 극복하면 된다, 즉 분쟁해결제도, 서비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공업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투명성, 통상을 막는 기술장벽분야가 끝나간다고 커틀러가 밝혔다.

<<인사이드 트레이드, 3.23>>

한미 쇠고기 쟁점

최근 두 나라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위급협상을 열었지만 아직 쟁점을 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개방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수역국이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이며. 멀리 볼 때, 미국쇠고기는 연령에 관계 없이 뼈가 있어도 안전하다.

한국이 단기간 뼈 없는 쇠고기를 들여오겠다고 제안할 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 제안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제안에 따르면, 뼈 조각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뼈 조각이 어쩌다가 들어갈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이 지난 주에 제안한 것을 보면, 들여온 쇠고기에서 뼈 조각이 들어 있는 것만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였다. 미국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뼈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이 모든 제품을 뼈 조각이 있는지 살피고 있지 아니 한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관리는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면서 일부에서 돌파구가 열렸다는 소식을 부인하였다. 3월 9일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을 마친 후, USTR 대변인은 두 나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아직 이야기 해야 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요구에 따라서 쇠고기시장을 연다면,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단기간이지만 뼈 조각에 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USTR대변인은 강조하기를 “쇠고기 쟁점을 해결해야 지금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이 잘 될 것이다, 한국은 쇠고기시장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쇠고기거래가 제대로 되었을 때, 자유무역협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거래가 제대로 되려면 뚜렷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수입조치가 있어야 하며, 국제수역국에서 만든 잣대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2006년 1월에 맺은 협정에 따라서, 뼈 없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여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쇠고기가 한국에 들어가 지 못하였다. 미국회사가 뼈 조각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 동식물검역협상에서 협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크라우더농업협상대표가 3월 19-20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USTR대변인이 말하였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정육협회장 패트릭 보일이 동행할 것이라고 한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3.13>>